

광주 군공항 해법찾기 ‘한달’...첫 단추 6자 협의체 언제나

대통령실TF·국정과제 채택 등
이재명 정부 들어 새로운 국면
정부·지자체 참여 로드맵 주목
‘공모 전환’ 버티는 무안군 관건

광주 군공항 이전이 대통령실의 태스크포스(TF) 구성과 국정과제 채택 등 새 국면을 맞은 가운데 해법찾기의 첫 단추격으로 정부 부처·광주시·전남도·무안군이 참여하는 ‘6자 협의체’ 구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실상 원점 재검토인 공모 방식으로 공항 이전 후보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무안군의 완강한 태도가 협의체 구성의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면서 광주·전남의 오랜 현안 해결의 물꼬를 트기 위한 지역사회 역량 결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타운 홀미팅을 갖고 광주 군공항 이전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실TF 구성과 6자 협의체 구성을 약속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곧바로 군공항 이전 추진을 위해 TF를 출범하고 정부·지자체가 참여하는 6자 협의체 구성을 위한 사전 작업에 돌입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광주시가 추진했던 소음도 측정, 이전지역에 대한 보상 규모와 방안, 이전 부지 개발계획 등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했다.

또 국방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련 3개 부처로부터도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

대통령실TF는 이전 관련 비용 추산과 공항 시설의 효율적 배치, 국가 재정 지원, 소음 피해 분석 등을 토대로 기관별 역할, 주권 부처 등을 규정하고 국토부·기재부·국방부·광주시·전남도·무안군으로 이뤄진 6자 협의체 구성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주민과 외부 전문가도 협의체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일에는 광주 군공항 이전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2007년 11월 국방부에 군공항 무안 이전을 건의한 지 18년, 2014년 10월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정식 제출한 지 11년 만에 해법 도출의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커지고 있다.

당시 강기정 광주시장은 SNS에 “광주는 정부 지원의 근거인 특별법도 만들고 과감한 지원도 약속했지만 무안군의 ‘불신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었다”며 “불신을 신뢰로 바꾸기 위해선 든든한 ‘보증인’이 필요했는데 대통령께서 보증인이 돼 주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주도로 무안지역에서 전투



전남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이취임식

김영록 전남지사가 24일 해남 우솔동백체육관에서 열린 ‘전남도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기 소음 측정을 해보자고도 제안했다.

이 같은 긍정적 흐름과 달리 실무협의의 진행할 6자 협의체 구성에 대한 지침 등 기본적인 안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전 합의가 다시 난관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6자 협의체의 주축인 무안군이 공모 방식으로 공항 이전 후보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점은 가장 큰 난제로 꼽힌다.

김산 무안군수는 지난 3일 대통령실을 찾아 “특정 지역을 정해놓고 군공항 이전을 추진해서

는 안 된다”며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사례처럼 여러 후보지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 공모 방식’으로 전환해달라”고 건의하는 등 완강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대통령실TF는 민간·군공항 무안 이전을 전제로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역할을 제시하는 것이다”며 “또 국정과제로 채택된 만큼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어떻게 육성할지를 고민하고 이전지역 보상과 공항 개발 계획 등을 서둘러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특히 “군공항 이전이 후보지 공모 방식으로 전환되면 입지 요건, 군 작전 전개 가능 여부 등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으며, 대통령실에서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6자 협의체 첫 회의의 정확한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지만 대통령실의 의지와 업무처리 등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로드맵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근산 기자

신승철 도의원 “영산강 하류, 배수시설 현대화 시급”

기록적 폭우로 농경지 침수
상류지역 유입 쓰레기 대란

최근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농경지 침수와 쓰레기 대란에 직면한 영산강 하류지역의 배수시설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농수산위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1)은 전남 열린 집중호우 피해 상황과 복구계획 보고회에서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지역 농경지 침수 피해와 영산강 유입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며 노후 기반 시설 개선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 17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 당시 영암 삼호지역의 낚은 FRP(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 배수관문이 파손돼 무화과 농장 등 수심 해타의 농경지가 침수되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해당 FRP 시설이 30여년 전 설치된 노후시설임을 강조한 뒤 “신소재를 활용



한 배수시설 교체와 과거 하천 부지로 낮아진 제방(뚝방)의 원상 복구를 통해 항구적인 침수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또 “담양, 광주, 나주 등 영산강 상류지역에서 유입되는 각종 쓰레기가 영암 삼호와 무안 등 하류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며 “환경유역청, 전남도, 시군 등 관계 기관별 소관 업무가 나뉘어 있지만, 결국 농업인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유기적인 협력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현재 영산강 하구둑은 배수관문을 통해 쓰레기를 차단하고 있지만, 수위 상승 시 배수관문이 개방돼 목포 앞바다로 쓰레기가 유입되고 있다. 최근 집중호우로 목포항 내에 약 700톤의 쓰레기가 유입돼 해양수산청과 전남도가 수거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근산 기자

“원인 규명 우선”...무안공항, 연내 재개항 불투명

활주로 연장 등 시설 개선에
유가족 협의까지 일정 빠듯

제주항공 참사 이후 문을 닫은 무안국제공항의 연내 재개항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활주로 연장 등 각종 안전시설 설치·보완을 비롯,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뜻을 고려하면 올해 내 재개항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3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2·29 참사 이후 3개월(1월·4월·7월) 단위로 무안공항 폐쇄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폐쇄 기간은 오는 10월 10일까지다.

국토부는 연장된 폐쇄기간 동안 공항 시설 전반의 안전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무안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는 우선 참사를 키운 주변으로 지목된 로컬라이저 개선공

사를 추진 중이다. 콘크리트 둔덕을 모두 철거하고 경량 철골구조로 전면 교체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199m 수준이었던 종단안전구역은 올 하반기 중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권고기준에 맞춰 활주로 양끝 240m 이상을 확보하기로 했다. 2,800m 길이의 활주로를 3,160m로 연장하는 사업도 올해 내 마무리 할 계획이다.

조류충돌을 최소화 할 대책으로는 올 하반기 전국 공항 중 최초로 조류탐지 레이더를 설치한다. 열화상카메라·음파발생기 등 추가장비가 8월까지 도입되며, 조류 대응 전담인력도 기존 4명에서 연말까지 12명으로 증원할 방침이다.

이·착륙절차 개선 작업도 10·12월 말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 한방향 정밀접근절차 사용을 목표로 항행안전시설의 신호 안정성을 점검하고 비행검사·항공정보간행물(AIP) 등재 등도 추진한다.

이 같은 시설 개선·보완 공사 진척도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 절차를 비롯해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 행정·형사적 조치 선행, 위험 시설에 대한 완벽한 개선을 요구하는 유가족들과의 협의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올해 내 재개항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 로컬라이저 개선사업은 유가족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둔덕 철거 및 교체작업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가족 협의외 관계자는 “무안공항 재개항에 앞서 최소한 사고원인에 대한 행정조치 또는 형사적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족들이 요구하는 개선사항을 확실하게 적용한 뒤 재개항하는 것이 순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가족과의 원만한 협의, 각종 시설 공사 진행 상황, 행정적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운영 재개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